

野심찬 ‘역사전쟁’... “개표조작” 발언에 삐끗?

새정치, 장외 투쟁 결의...與, 대선 부정 발언 강경 대응

“총선 앞 밀리면 끝”...예산·법안 심의 졸속·파행 우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파행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를 놓고 사실상 ‘역사전쟁’ 모드로 전환한 가운데 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 지난 2012년 대선과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원내외 투쟁에 나선 반면, 여권은 대선 불복이라는 비난과 함께 야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정기국

회 예산·법안 심의도 파행과 졸속으로 흐를 것이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에서 출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야권 세력과 공동 전선을 구축한데 이어 ‘장외 투쟁’에 나서는 등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원내외 병행투쟁이 야당의 기조지만,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되면 전면 장외투쟁 또는 정권 퇴진 투쟁으로까지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14일 문재인 대표가 주관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 문제 해결 정국 수요집회’에 참석하는 등 사흘 연속 역사교과서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한 전면 ‘장외 투쟁’은 ‘굉(지)지(지)도’도 있고 ‘알(내년 예산 심의)도’도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인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장외 투쟁’에 나섰다가 지지율이 하락하고 예산 심의에서도 손해를 본 경험도 있다.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의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도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개인 의

견’임을 분명히 했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야당이 암묵적으로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김성우 청와대 홍보보수는 워싱턴DC 현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의원의 사과와 새정치연합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한편, 새정치연합 문 대표에게 강 의원의 출당 조치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야당의 장외 투쟁에 맞서, 역사교과서 논란을 ‘민생 대 이념투쟁’의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의원정수 소폭 확대론 솔솔~

與 지역구수 확대 불가-野 비례대표 축소 불가

300명 현행 유지시 절충 어려울...여론 설득이 관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작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정지권이 막판에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소폭 늘리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것이라 전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선거구 획정 논의 초반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정수를 369명으로 늘리는 안을 내놨다가 여론의 못매를 맞으면서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의원정수 증원 언급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할 경우 도시인구 증가와 농어촌 인구 감소 속에 선거구 인구격차 2대1 이내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구 감소 또는 비례대표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부각되면서 ‘의원정수 소폭 증원론’이 또다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일찌감치 국회의원 300명 유지를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도 같은 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결국 여야간 합의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해선 약간 명의 의원정수 증원을 받아들일 것이라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정수 증원이 부상하고 있지만 언론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있어 여야는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작업은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도록 결정하면서 시작됐고 소폭 늘리는 방식은 조하나 허한 미달로 조정 대상에 포함된 선거구 숫자가 무려 60여 곳이나 달해 대대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선거구 획정을 하더라도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 의석은 10석 안팎이 늘어나는데 반해 농어촌 의석은 같은 수만큼 반드시 줄어야 해 국토 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여야는 “농어촌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묶어놓고 비례대표도 줄이지 않으면서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축소도 최소화하는 방법은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원지코리아컨설팅’의 김병도 수석컨설턴트는 14일 “새누리당은 지역구수 증가를,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유지를 각각 마지노선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때문에 결국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확정 법적 시한의 압박을 받은 모양새를 취하면서 의원정수 소폭 증원에 전격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혁신위 해산 연기, 박정희 3선 개헌 같다”

박지원 비판...“文 리더십 못세우니 모두 혼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4일 임무를 마친 당 혁신위원회가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구성 완료 등을 요구하며 해산을 연기하고 있는 데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을 하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고 해놓고 대통령 권한을 넘겨준다고 해놓고 대통령 권한을 넘겨준다고 해놓고 대통령 권한을 넘겨준다고 해놓고...”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홍입니다’에 출연,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좀 더 민주적 신뢰를 위해 당원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애초 약속대로 즉각 해산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어제도 혁신위원 한 분과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평가위 세척이(최고 위원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신을

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기에 9월까지만 하겠다”고 한 만큼 모든 것은 문제인 지도부에 남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상곤 혁신위가 월권하는 행동에 대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혁신위가 총선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저를 포함한 중진과 여러 의원들에게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해라’하며 당을 전부 들쭉서 놓았고, 문 대표도 정확한 리더십을 못 세우고 있다”며 “(문 대표는) 혁신위에게 ‘임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터 내가 (혁신을)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혼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0·28 재보궐 선거

선거운동 오늘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8 재·보궐 선거의 선거운동이 15일부터 시작됐다고 14일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전날인 27일까지로,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4일 서울 중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0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김복동 할머니(가운데)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숨 고르는 ‘신당 창당’

역사전쟁에 야권 단결모드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의 ‘역사전쟁’이 첨예해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진영과 신당 창당 세력의 행보도 주목하는 모습이다.

당내 비주류 진영은 국정감사 이후 ‘통합’을 내세워 문재인 대표 등 주류 진영 압박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과도한 당내 투쟁이 ‘역사전쟁’ 국면에서 적전분열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내부 투쟁이 봉합되는 분위기나”라는 질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수세에 놓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특히, 교과서 문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비주류 진영에서는 역사 전쟁으로 문재인 대표를 중

심으로 하는 주류 체제가 공고해지지 않는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당 추진 세력도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역사 전쟁으로 새정치연합이 내부 갈등보다는 단결 모드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당 세력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천정배 의원이 여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야권 3차 연석회의’에 합의함에 따라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당 측 핵심 인사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신당 세력 간의 원탁회의 등이 진행되면서 신당의 바람이 일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